

**원희룡 장관,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건설노조 공사중단
움직임 관련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점검**
- 건설공사 피해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5일(월)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 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, 부·울·경 지역 건설사 피해 규모 등을 점검하고, 현장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-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(12.2)하고 이에 동조하는 파업을 예고하였으며, 특히 부·울·경 지역의 경우 레미콘 타설 등 공사중단에 착수하겠다고 한 바 있다.
- 원 장관은 레미콘 타설을 막기 위한 긴급 지령 등 부울경 지역 내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에 대해 “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불모로 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더해 건설현장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행위”에 불과하다면서,
 - “건전한 건설현장 노동질서 구축을 위해 업무방해, 채용강요,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또한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“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”을 당부하면서,
 - “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”함으로써 “진정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”하겠다고 강조하였다.

2022. 12. 5.

국토교통부 대변인